

주제회의  
성소수자

기후 위기의 시대, 성소수자와 기후정의,  
인권 도시의 역할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기후위기는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조건이지만, 2022년 여름 한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재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결과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지역과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이며, 인권과 존엄의 문제다.

기후위기는 비규범적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의 취약성을 증폭시킨다. 2020년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감염병 팬더믹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정과 노동시장 주변화, 빈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등의 문제는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기후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이미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착취와 억압,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그동안 요구해 온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 보장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기후정의에 대한 요구에 성소수자 시민의 목소리를 기입하기 위한 담론 생산과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 도시의 역할 역시 새롭지 않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반차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책과 행정 관행에서 교육권,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도시의 책무일 것이다.